

종합 토론

임 준 홍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박 상 학 |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원구위원

김 동 호 |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 종 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토 론 문 1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접점 찾기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의미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시장과 정부실패를 보조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사회적 경제는 시장실패나 복지영역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영역이며, 대체·대안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퀘벡이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국가나 도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과 개념이 있지만 나는 '사람 중심의 협동경제'로 정의한바 있다(충남연구원(2011),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재생과의 접점 찾기

이러한 기본적 개념에서 보면, 도시재생과의 접점이 많을 것이다.

2009년 국가교통부 도시재생 R&D 연구에서도 영국의 도시재생 벤치마킹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당시 이슈화 된 사회적 기업(2007년 법제정)과의 연계를 고민한 적이 있다. 그 때만 해도 왜, 도시재생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이야기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해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주민주도와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생각할 것이며,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점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 다른 점은, 짧은 지식으로 다른 점을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많은 우려가 된다. 특히 지방도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주거지재생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접점은 일자리보다 사람중심-공동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공통점을 찾고, 협력하는 하면서, 하나로 융복합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핵심은 “사람 중심”, “커뮤니티”이다. 이에, 가시적 목표달성을 위해 일자리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표면화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도시재생의 내용적 융복합 만큼이나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 적용 가능성과 응용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성공적 결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본연의 성격을 이해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상생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무한하다”

- 사회적 경제의 콘텐츠 만큼 - 도시재생의 융복합 만큼 -

그렇게 할 때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기반은 사람중심의 판단기준과 협력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만남은 생각보다 큰 효과와 도시계획의 지속성-사회적 경제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효과,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토 론 문 2

박상학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I.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사회적기업과 공공의 역할

- 최근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 증대 및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주거복지의 이슈로 부각
- 발표자료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논의 구체화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2016년 6월3일 개정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LH에서 공급하는 임대단지중 착공이 시작된 66개 단지(2016년 6월 현재기준)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LH단지 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기업육성
 - LH 공공임대단지에 입점한 사회적기업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 조사 대상 기업들의 경우 가사도움, 제빵, 도시락, 재활용, 장애인재활, 집수리 및 개보수, 에너지효율자재 등 여러 유형임
 - 이들 업체들은 상가 임대료 30%만 부과하며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어려움에 봉착

- LH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운영방안(2016.12)

- 사회적기업 유치 절차

- LH가 운영하는 경우

<적용범위>

- 지역본부별로 공사·지자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공모 공고 후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 단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입주기업 결정

-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

<적용범위>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과 같이 관계법령·지침·인허가·협약 등에 따라 해당 공간을 지자체 등 외부기관이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사전에 협의

- 사회적기업 공간 사용조건

○ 사용료 면제

- 사회적기업 공간 설치의 취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LH 역할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면제
- 사용료 면제 세부사유

- ① (사회적기업 공간 설치 취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 ② (행복주택 사례)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공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임대 가능(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 제7항)
- ③ (영세산업)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익의 2/3이상을 사회환원하는 등 수익률이 낮으므로 자생력 확보
- ④ (업종제한) 일반상가와 달리 의료·보육·복지 등에 한정하여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일간제공, 홍보지원등 필요)확대 필요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소기업 발굴 및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 완화 필요)

○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연계

➔ 주민-지자체-시행자-국가간 협업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과 마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모델

➔ 게스트 하우스 또는 비즈니스센터 확대 설치 (농촌일자리 거점)

- 농촌일손돕기 사업화 ➔ 일자리 창출

➔➔ 공공임대단지의 사회적 기업유치활성화를 통해 지역취약계층 소득창출 및 주변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II.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공동체 자산화

- 격차사회, 동지내몰림 등 삶의 토대가 불균형 불안정한 사회

- 집없는 가구가 44%인데 집을11채 이상 가진 가구가 3만7천 가구

- 상위10% 인구가 개인토지의 97.6% 보유
- Gentrification ----> 삶이 파괴되는 한 단면

➔시민자산의 개념 이슈로 대두

- 시민자산에 대한 개념을 사회공동체가 인식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 시민자산이란 시민이 함께 도시(공동체)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자 함께 소유.운영하며 책임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산--->개별자산 만들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투자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역량 강화--> 지역지역문제, 저소득층 생활문제 극복

-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과의 연계

- 지역공동체 주도-공동체 토지신탁
- 경제조직 주도형-지역개발신탁
- 부동산투자협동조합
- >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의 역사적 배경이 깊은 반면 한국은?

- 시민자산 형성과 도시재생과의 연계성이 문제

- 지역기반 비즈니스 투자 (북카페 창업의 사례)
-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통한 사회적개발시도---성산동 "함께 주택협동조합" 의 경우 지자체(서울시)가 저렴한 토지제공--- 한계 있음. 확장성(향후 동 종류의 사업추진 확대상)의 문제

-공동체 자산화 문제(소유구조와 지속가능성의 문제)

- 소유구조 (함께 하는 자산화--공유형태 법인등기)
- 공유자산 운영상의 적절한 의사결정 등
- 지속가능성의 문제--- 가장 핵심적 과제